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9년 2월 2일(월)
통권26호(제2권 제4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정경분리, 나진-하산프로젝트 참여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기어이 여기까지 왔다. 1월 30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 위원회는 그동안 남북간에 이루어진 정치군사적인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91년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도 파기했다. 해상경계선으로서의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서해상에서 연평해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바야흐로 지난 17일 북한 총참모부가 발표했듯 이제 남북은 전면적인 대결국면에 돌입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다. 이번에 북한이 무효화를 선언한 남북 합의에서 교류협력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됐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치군사적인 대결국면의 와중에서도 교류와 협력사업은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메시지이다.

이같은 정경분리 원칙 준수의 메시지는 파기를 선언한 정치군사적인 합의사항 가운데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합의사항은 예외로 한 것 같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대부분의 교류협력사업은 신변보장, 물자이동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보장이 필수적이다. 개성공단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통문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왕래해야 하는 특성상 남북 군부의 보장은 개성공단 사업에서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다. 실제로 지금이야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지만 2007년 12월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대한 3통 보장도 실효적인 합의는 부총리급 회담이 아닌 군부의 장성급회담에서 이루어졌다.

만약 북한이 파기를 선언한 정치군사적 합의사항에 교류협력사업 보장을 위한 합의까지 포함했다면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에 보장했던 모든 약속은 이 시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공단 폐쇄와 관련한 어떠한 움직임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조통평이 무효화한 정치군사 분야 합의사항 가운데 교류협력사업 보장을 위한 합의는 제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나름대로 북한이 정세 변화와 상관없이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준수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체제대립자로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군사적인 대결이 불가피하더라도 교류협력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12·1 조치처럼 정경분리의 틀에서 벗어난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주관적으로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정치군사적인 긴장은 고조시키면서도 그 이면에 교류협력 유지라는 시그널을 담은 것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남쪽의 대답을 요구하는 북한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남쪽이 화답을 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정경분리의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예를 들어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의사의 표명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나진항을 개발하여 러시아의 국경도시인 하산을 거쳐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연결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이미 작년 10월초 공사 착공에 들어간, 현재진행형 사업이다. 북한과 러시아철도공사는 한국을 전제로 한 제3국의 참여 지분을 보장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동절기라서 중단돼 있지만 조만간 해동과 더불어 재개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 한국이 단순 투자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의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정부의 참여와 보장은 필수적이다. 남북의 정치군사적인 긴장이 최고점에 이른 지금 이에 대한 참여 의향을 밝힌다면 북한에게 우리도 정경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사실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도 세계경제의 위기가 겹치면서 2009년 남북경협사업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런 상황에서 정경분리 원칙 준수를 확인하는 남북의 메시지 교환은 남북경협사업에 반전의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물론 정경분리를 말하기 전에 남북은 무조건 만나야 한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방관무시정책이 무능한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물이어서는 안 된다.

▶제26호 목 차

이주의 칼럼

남북이 한반도 현실을 직시해야 2

이주의 주요 기사

김정일 “6자회담 진척 희망”... 중국 왕자루이에 밝혀 3

개성공단 정상화 상반기가 분수령 4

北 대변 조선신보, 오바마 ‘脫부시’ 주목 5

北 “남북기본합의서 NLL조항 폐기” 6

불안·초조...개성공단 ‘살얼음판’ 7

대북 인권단체들, 직접 美정부서 자금 받아 8

北, 김정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 추대 9

WP “남북간 서해 군사충돌 가능성 높아져” 10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10

金総書記を最高會議代議員候補に推戴 10

추천논문 / 북한 정세와 남북한 관계 전망 11

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 11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9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 심포지움 제1차

▶주제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일시 : 2009년 2월 5일(목) 10:00

▶장소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세미나실

●남북물류포럼 제30회 조찬간담회

▶주제 : 평양, 나진 선봉지역 남북경협 물류사업 : 도전과 가능성

▶일시 : 2009년 2월 10일(화) 07:15

▶장소 : 퍼시픽호텔 3층 장미홀

이 주의 칼럼

남북이 한반도 현실을 직시해야

곽태환(전 통일연구원 원장/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1.13)을 통해 ‘선 북미관계 정상화 후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원칙적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북미간 관계 정상화가 기본임을 강조하였다. 북미관계 정상화 없이 핵무기 폐기는 없을 것이라는 북한의 강한 메시지는, 향후 6자회담과 북미관계의 열쇠는 오바마 신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환 의지와 북미관계 정상화 여부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 내정자는 상원인준 청문회(1.13) 서면 답변서에서 “관계정상화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북한에게 4가지 현안(플루토늄 생산,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북미관계의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북한의 입장과 상반된다.

북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 북이 밝힌 ‘선 북미관계정상화 후 비핵화’ 주장에 대해 오바마 새 정부는 “큰” 소리로 “노(no)”라고 대답했다. 오히려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 협상을 주창하는 힐러리 국무장관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의 핵폐기’를 강조하였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6자회담 유관 당사국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대남 적대적 비방을 중단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북한이 합의한 9.19공동성명(제1항)과 2.13합의와 10.3합의 6자간 합의도 무시한 ‘선 북미관계 정상화 후 비핵화’ 입장을 고집하면 북미간 외교충돌은 불가피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신기자클럽 초청 연설(1.15)에서 남북미 3국 정상에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한반도 현안해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명박 정부에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선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전단(빠라) 살포를 중지시키고 6.15, 10.4선언을 인정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중지할 것”을 권유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준수를 강조하는 북한이 그에 역행하는 비난을 일삼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남한 정부가 대북대화 재개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해서 대화 재개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취임하면 북한과의 핵문제 해결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담한 일괄타결의 모개홍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김 전 대통령의 현실적 정책제언을 수용하면 경색된 남북관계는 풀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정상 간에 합의한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6.15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통미통남(通美通南) 전술로 전환하여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보낸 ‘비핵화와 평화공존’ 메시지를 똑바로 읽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시한 현실적 현안해법을 수용하는 것이 북한의 생존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인하면서 그의 통 큰 정치적 결단을 기대해 본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505>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NDP, 대북사업 일부 재개 평양에 직원 재파견

-- 1월 23일 뉴시스

유엔개발계획(UNDP)은 2007년 3월부터 전면 중단된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 프로젝트를 일부 재개할 전망이라고 지지(時事)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유엔 외교소식통은 전날 UNDP의 의사 결정 기관 집행이사회(36개국 구성)가 일부 대북사업의 재개를 승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소식통은 UNDP가 대북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 철수했던 직원들도 다시 평양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UNDP는 대북사업과 관련해 외화 집행비용을 사용처 검증도 하지 않은채 북한 당국에 건넨 사실이 적발되자 미국 등의 강력한 요청으로 모든 사업을 중단시켰다.

일부라도 대북사업이 재개될 경우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이은 북한에 대한 유화책이 된다.

북한 한의원, 예멘에서 인기

-- 1월 24일 노컷뉴스

예멘의 수도 사나에 북한 정부가 파견한 한의사들이 현지인들의 질병치료에 인기를 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예멘의 영어 신문인 예멘 타임스를 인용해 “지난해 3월 예멘의 수도 사나에 고려 전통 동방약 센터라는 이름의 한의원이 문을 열어 북한 한의사들이 각종 한약재와 쑥뜸, 침술, 마사지 등을 통해 예멘인들의 질병을 치료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의원의 총 경영을 맡고 있는 의사인 알-소리히 씨는 “북한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 독특한 한방 치료법을 개발했다”면서 “독일 등 선진국의 현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가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이 북한 한의사들이 있는 고려전통동방약센터에서 더 나은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알-소리히 씨는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능 장애와 서양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007년 예멘 통일기념일에 북한 기술자들을 만나 북한 측에서 공동사업을 제안하고, 북한 정부에서 숙련된 의료진을 제공해 센터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알-소리히 씨는 “고려전통동방약센터에서는 북한 의사 3명이 오전 8시부터 1시, 그리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료해 개원 이래 지난 9개월 동안 치료한 건수는 700건으로 처음에는 환자 수가 적었지만, 예멘인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지금은 하루 12-15명을 진료한다”고 밝혔다.

한약재와 치료 기구 등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에서 들여오고 예멘에서 직접 채배하는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으

며, 비용은 진단비용이 미국 돈 5달러 정도, 치료비는 17-25달러로 비교적 비싼 편이기 때문에 주로 돈이 있는 환자들이 한방치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김정일 “6자회담 진척 희망”... 중국 왕자루이에 밝혀

-- 1월 24일 세계일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3일 평양에서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들고 온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상태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자회담 당사국들과 평화적으로 지내고 6자회담이 진척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다는 와병설이 나온 이후 공식석상에서 외빈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왕 부장 면담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20일) 직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미국에 자신이 건재함을 알리는 메시지로도 분석된다.

후 주석은 친서에서 김 위원장에게 “편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며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초청했으며 김 위원장도 후 주석의 방중 요청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후 주석은 또 김 위원장에게 “중국 공산당과 정부를 대표해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한다”면서 “올해는 북중 수교 60주년이자 양국 우호의 해인 만큼 이를 기회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북중 관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두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중 우호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화답했다.

김정남 “北 후계구도 관심없다”

-- 1월 24일 연합뉴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38)은 24일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는 아버지만이 결정할 문제”라며 자신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김정남은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것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면서 “아버지께서만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남은 이어 “북한에서 큰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으며,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이런 민감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후계구도와 관련, “결정되기 전에 가정하고 상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으며, 동생인 김정운이 후계자가 될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서도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휴대전화 서비스 ‘도청문제’로 대폭 지연

-- 1월 25일 뉴시스

북한에서 작년 12월 중순에 개시된 휴대전화 서비스가 도청 시스템의 정비가 늦어지면서 본격화되는 시기가 대폭 지연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지난해 말까지 북한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약 1200명에 머물러 보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했다.

북한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집트 통신사 오라스콤 텔레콤은 2008년 12월15일 제3세대 방식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소식통들은 북한이 지난해 4월께 이동통신 서비스에 나설 방침을 굳히고 계획을 추진했으나 오라스콤이 제공한 도청 시스템의 성능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차질을 빚게 됐다. 도청 시스템의 정비에는 6개월 이상이 걸렸으며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는 평양 이외 지역과는 통화할 수 없는 상태라고 신문은 밝혔다.

북한은 앞으로 함경남도 함흥과 평양 남부에 위치한 평안남도 평성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도청당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휴대전화기가 대당 약 500유로(약 89만원)로 비싸 가입자가 대폭 늘어날지는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설 맞은 북한주민들, “명절은 즐거워요”

-- 1월 14일 노컷뉴스

설날을 맞아 북한 주민들도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친척과 친구 집을 찾거나 윷놀이 등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67년 봉건 잔재를 뿌리 뽑는다는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음력설 대신 양력설을 지켜오다가 지난 1989년부터 음력설을 민속명절로 정해 하루를 쉬고 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설날 아침 북한주민들은 이른 아침 김일성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초상에 충성을 다짐하는 절을 하고 차례를 지낸 뒤 어른들에게 세배하고 친척이나 친구 집을 찾아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고 말했다.

양력설에는 주민들이 인민반 별로 김일성 주석 동상을 참배 하지만, 음력설에는 자유롭게 하고 있으며, 가정의 생활 정도에 따라 오곡밥이나 콩밥을 짓거나 입쌀밥(쌀

밥)과 돼지고기, 송편, 찰떡 등을 장만해 가족들이 한데 어울려 명절을 즐긴다.

설날을 맞아 윷놀이와 장기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로 흥을 돋우고, 최근에는 특집 방송하는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한편, 설날을 맞아 평양 시내에는 특색있는 불장식(네온사인)을 설치하고 명절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 식당과 야외 매대를 점검하는 등 설 준비가 한창이라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노동신문은 평양 시내 대형식당인 옥류관, 청류관 등 유명식당에서는 명절 요리를 준비하고 평양시인민봉사지도국 아래 각 식당에서 군밥, 군고구마, 땅콩 매대를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동문영화관 등 평양 시내 영화관에서는 다양한 영화가 상영되고 사진관에서는 다채로운 사진봉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상반기가 분수령

-- 1월 27일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12·1 조치로 개성공단이 파행 운영된 지 2달여가 지나고 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 정상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역학적 지형이 일정부분 달라지면서 공단 정상화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통일부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실질적인 공장 가동률은 북한의 12·1 조치 이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북측의 조치도 문제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한파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개성공단의 어려움은 남북교역에 즉각 반영됐다. 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18억2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2% 증가에 그쳤다. 개성공단 관련 교역은 8억1000만달러로 전년대비 83% 증가했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교역규모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통한 공단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정치적 어려움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평상심’을 되찾고 경영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지난 2개월 동안 북한은 군부의 강성발언을 통한 대남압박을 지속했고 전면 차단 추가조치를 시행할 우려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개성공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정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단에서는 2차 조치가 나오면 개성공단에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북측에서도 개성공단의 의미를 간과할 수 없어 실제 결행에 옮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남북관계 경색 여파가 지속되는 지금도 개성공단이 정상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

이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된다.

北공장들 새학년도 학용품 생산 분주

-- 1월 27일 연합뉴스

북한의 각 학용품 공장들이 오는 4월1일 신학년도 개시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공급할 학용품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7일 소개했다.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학생용 가방을 생산하는 평천가방공장의 박봉철 지배인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학용품 생산은 나라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후대들에게 훌륭한 학습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의 하나”라며 “현재 많은 가방들이 생산됐고 2월 말경에는 생산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천가방공장에서 만들어진 가방에는 필통, 자, 책받침, 크레파스, 지우개, 학습장 등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진 학용품이 채워져 평양 시내의 소학교 신입생들에게 공급된다. 이에 따라 가방 이외에 다른 학용품을 생산하는 평양 수지학용일용품공장, 평양학습장공장, 평양학용품공장 등에서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1996년부터 새 학년도 개학일을 9월 1일에서 4월 1일로 바꾸었으며, 이에 따라 3월을 ‘학교지원 월간’으로 정해 교재 준비와 교과과정 점검, 교과서와 학용품 공급 등 개학 준비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

“北, 2011년까지 평양에 10만 세대 아파트 건설”

-- 1월 27일 노컷뉴스

북한은 오는 2011년까지 평양 시내에 10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고 만수대거리 살림집 공사는 올 상반기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7일 평양수도건설부 전 일훈(45)국장의 말을 인용해 “새해 공동시설관철을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아파트)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만수대거리 살림집 건설공사는 올 상반기 중에 끝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또 “올해 구강종합병원, 평양예방약공장 등이 새로 건설되게 되며, 음악무용학원, 중앙식물원, 중앙동물원 수족관 확장, 평양시 중심거리 건물타일붙이기 등 개건보수공사가 힘 있게 추진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北 대변 조선신보, 오바마 ‘脫부시’ 주목

-- 1월 27일 연합뉴스

“부시 정권 시절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반영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7일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부시 행정부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특히 북미 직접대화에 관한 오바마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발언을 집중 소개했다.

이 신문은 ‘부시의 교훈에서 출발하는 오바마 외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대조선(대북) 정책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표시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대목 등을 예시했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구성원 면에서도 “부시정권 시절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다”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 등 “클린턴 정권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수많이 등용된 것도 특징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을 지목해 “조선문제에 대해 대화 노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특기하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상원 외교위원장 시기에 부시 정권의 대조선 정책은 실패했다며 부시식 강경노선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조(북)미 직접대화를 일관하게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조선신보는 바이든 부통령의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양을 여러 차례 다녀간 프랭크 자누지씨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시기에 오바마 진영의 대조선 정책고문”을 지낸 사실을 지적하고 그도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국간 협상과 함께 조미 양자 대화의 중요성을 제창했다”며 “자누지씨는 새 정권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핵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으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핵문제에 대해 “시급성을 가지고 행동하겠다”며 “조선과의 양자적 직접외교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정부 “北 화폐 승인 없이 반입하면 위법”

-- 1월 28일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에 살포할 목적으로 북한 화폐를 반입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28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단체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없이 북한 화폐를 반입한 뒤 전단지 등에 동봉해 북에 살포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를 위반”이라며 이는 관련 부처간에 진행한 법률 검토에 따른 결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대상 물품을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또 대북 살포를 위한 북한 화폐 반입을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다음 달 대북 전단살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북한에서 최고객권인 5천원을 풍선에 함께 넣어 보낼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북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내달 방미

-- 1월 28일 경향신문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 고위 인사의 미국 방문이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다음달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남북미 학술행사에 참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하지만 리 부위원장과 미 행정부 관계자 간의 공식 접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수의 외교소식통들은 “리 부위원장이 미국 방문 때 오바마 행정부와 접촉을 희망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미측의 대북정책이 아직 검토단계인 만큼 북미 간 공식 접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한식 조지아대 교수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운영관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 측 학자들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 부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아태 평화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남북교류의 북측 파트너 역할을 맡아왔다. 1996년에도 조지아대가 주최한 북미 기독교회의에 북한 측 대표로 참석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해왔다.

북측은 지난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을 전후해 외무성 고위관리의 워싱턴 방문 의사를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식조사] MB정부 대북정책...“얼어붙은 남북관계 실망” 51%

-- 1월 29일 세계일보

대북정책에 대해선 국민 과반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드러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15.5%, 대체로 35.7%)은 51.2%에 달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7.4%(매우 4.2%, 대체로 33.2%)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

가 많은 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북한이 ‘전면대결 태세 진입’ 발언 등으로 대남 군사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 응답은 30세 미만 젊은 층(68.4%),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61.1%), 서울 거주자(57.4%) 등에서 많이 나왔다. 민주당 지지자(83.0%), 광주·전라 거주자(79.3%) 및 출신자(72.5%), 진보적 이념 성향자(68.8%) 사이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현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이 과거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을 부정하고 있어서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햇볕정책 대신 실용주의에 입각한 상생공영정책을 내세웠다. 특히 그 구체적 전략으로 ‘비핵·개방 3000’ 정책을 제시하며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를 연계했다. 핵을 먼저 포기하면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정책인 만큼 북한은 그동안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반면 긍정 응답은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자(70.6%), 한나라당 지지자(63.0%), 보수적 이념 성향자(52.8%), 50대 이상 고연령층(49.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北 “남북기본합의서 NLL조항 폐기”

-- 1월 30일 연합뉴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평통의 이번 성명은 지난 17일 대남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은 것으로, 역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긴장 책임을 남한에 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평통은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증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고 일방적인 무효화 선언 대상을 예시했다. 조평통은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평통 성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과정에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과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 “북남 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며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운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북남합의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중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기본합의서상 NLL 조항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조선전쟁 교전 일방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 합의의 기본취지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하루빨리 공정하게 확정하여 분쟁의 불씨를 없애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악용해 열토당토 않은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고집했을 뿐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그 유령선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로 나오고 있다”며 “남의 집마당에 제멋대로 금을 그어놓고 제집 마당이라고 우격다짐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 ‘비핵·개방·3000’ 입안자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통일부장관에 내정한 것은 “우리와 끝까지 엮서 나가겠다는 것을 세계 면전에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다”며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고 주장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부정한 마당에 이제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논할 여지가 있고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北조평통 성명 ‘최고수위’ 대남 메시지

-- 1월 30일 연합뉴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30일 발표한 성명은 북한내에서 조평통의 역할과 위상을 감안할 때 남한 정부를 겨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공세로 풀이된다.

조평통(1961년 5월 설립)은 노동당의 통일 및 대남정책을 대변하는 최고의 대남기구로, 남한내 주요 사건 또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북한 당국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조평통 위원장은 ‘림격정’ 저자인 홍명희 초대위원장과 한글학자 리극로 등을 거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80년대 이후에는 허 담 대남담당비서(1991년 5월 사망)를 끝으로 공석이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었던 김용순 대남비서(2003년 10월 사망)마저도 부위원장에 머물렀을 정도로 비중있는 자리다.

부위원장은 현재 김기남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월북한 오익제, 리종혁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강관주 노동당 대외연락부장이며 특히 안경호 통전부 부부장은 부위원장 겸 서기국장을 맡고 있고, 그 아래 직급과 서기국은 통전부 직원들이 겸임한다.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통전부장 겸 국방위 참사도 직책으로 미뤄 조평통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은 안된다.

조평통은 북한의 대남 입장을 성명, 대변인 성명, 담화, 대변인 담화, 서기국 보도, 비망록, 논평, 기자회견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내보낸다. 고발장, 공개질문장 등의 형태도 있다.

북한의 공식 대외 발표문의 형식은 크게 성명, 담화, 비망록, 논평 네 가지다.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가 펴낸 북한 ‘현대조선말사전’에 따르면 ‘성명’은 “나라의 주요한 정치·법률적 문제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와의 관계, 문제 또는 중요한 국가적 사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적인 문서”이다.

‘담화’는 “일정한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말”이어서 성명보다 격이 떨어진다.

‘비망록’은 “역사적 진상을 밝히거나 법률적 해명을 위해 국가가 발표하는 것”이며 ‘논평’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일정한 사회·정치적 사변(사건)을 기동성있게 분석, 평가하는 것 또는 그 평(評)”이다.

불안·초조...개성공단 ‘살얼음판’

-- 1월 30일 헤럴드경제

北측의 ‘남북기본합의서 NLL조항 폐기’ 일방 선언으로 남북관계에 다시 적신호가 켜지면서 개성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미 지난 17일 북한이 대남 전면전을 선언한 이후 살얼음판을 걸어왔는데 오늘 발표로 불안감은 증폭되는 형국이다.

섬유업을 하고 있는 A업체의 대표는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뉴스를 접한후 일찍 도라산역으로 출발했다”며, “정부의 지침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테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당장 거래선이 위축되고, 원부자재 결제일을 앞당겨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많다는 설명이다.

식품업에 종사하는 B업체의 관계자는 공단 내 공장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가 이번 발표를 접하고 마음이 더욱 착잡하다고 했다. “공단 입주 업체들 사정을 보면, 거래처로부터 발주가 50%이상 떨어지고, 기존의 거래선이 끊기는 등 공단 상황이 어렵지만, 투자자금도 당장 회수할 수 없어 일단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2차 분양을 받은 업체들의 공사 중단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정부측의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업체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차라리 공단을 폐쇄하면 투자금 일부분이라도 회수할 수 있지만, 그러지도 못할 상황이라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한편, 북측의 발표가 ‘정치군사’상의 합의사항에 국한돼 있어서 이미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건설자재를 가공하는 C업체의 관계자는 “‘12·1’조치 당시에는 북한당국자가 직접 찾아와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이번 발표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공장 가동에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대남공세 도움안돼” <美국무부>

-- 1월 31일 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30일 북한이 정치, 군사적 남북합의를 일방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북한의 대남공세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남북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이러한 수사적 공세는 분명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우리의 계속적인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지난 29일 남북합의 무효화 선언에 대해 “북한 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전에도 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봤고 앞으로 평양에서 적대적 수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공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또 이번 북한의 성명 발표 이후 특이한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처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무장관은 이 지역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서 북한도 국제사회가 6자회담에서 요구하는 것이 검증의정서임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또 “북한은 우리의 우선적 현안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6자회담이 유용성이 있다고 여전히 믿고 비핵화 목표에 전념하면서 이 지역의 우방과 협력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의 이번 상황과 관련, 지역담당 관계자들과 반드시 협의할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대북 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여전히 살펴보고 있어 재검토 작업이 끝나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북 인권단체들, 직접 美정부서 자금 받아

-- 1월 31일 연합뉴스

국내 탈북자들이 만든 대북 인권·민주화 단체들이 미국 국무부로부터 직접 활동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통해 국내 민간 대북방송 등 대북 인권 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직접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대북 인권·민주화 사업 계획을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31일 이들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유북한방송이 50만달러, 탈북여성인권연대가 30만달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20만달러를 각각 미 국무부의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HRDF)’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국무부와 30만달러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NED를 통해 자금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국무부가 직접 지원하기는 처음”이라며 국무부의 북한 인권증진 아이디어 공모에 응모한 단체 가운데 일부 단체가 수혜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년치 자금을 받은 자유북한방송은 현재 100Kw인 대북방송의 전파 출력을 높여 북한내 가정권을 확대하고, 하루 5시간 방송 중 절반을 재방송하던 것을 모두 편집 방송으로 운영하며, 방송국 인력을 확충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방북’ 美한반도 전문가 7명의 ‘오바마 메시지’는?

-- 1월 31일 노컷뉴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7명이 다음주 초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북단의 일원인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차관보는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7명의 미국 측 인사들이 3일부터 7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북한 고위층 인사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간 첫 민간교류가 될 이번 방북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대사,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차관보, 리언 시겔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그램 국장,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수석 고문인 토니 남궁 박사 등 모두 7명으로 오는 10일 미국에 돌아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방문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민주당 진영에 가까운 인사들로, 북한 핵 문제를 다른 마·북 간 주요 현안들과 한데 묶어 해결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주장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미국 전문가들의 이번 방북은 북한 측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방북 결과를 오바마 행정부에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반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전문가들의 이번 방북은 지난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을 초청한 데 대한 답방이 아니라, “다른 동기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 군사적 충돌 재차 경고 “남한정부, 외면의 대가는 파멸

-- 2월 1일 경향신문

북한 노동신문은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을 거론하면서 북측의 경고에 대한 남한 정부의 외면은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화근은 제때에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평통의 성명은) 남북관계가 더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한 당연한 조치”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가 험악한 지경에 처하게 된 책임이 있으며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우리의 준엄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한 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뒤 “(남측은) ‘상투적 협박’이니 ‘버티기 전략’이니 뭐니 하며 우리의 경고를 외면하고 오히려 반공화국 대결과 북침전쟁 도발 소동을 벌여놓는 것으로 답답해 나섰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어 “정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결은 곧 긴장격화이고 그것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군사적 충돌,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의 준엄한 경고를 외면하고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것이 중국적 파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공세적 성명 도움안돼” 오바마 행정부 첫 공식

반응

-- 2월 1일 한겨레신문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남북한 사이의 기존 정치·군사적 합의를 무효라고 선언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첫 공식 반응을 보였다.

로버트 우드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수사적 공세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계속적인 노력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또 “북한의 의도는 북한 쪽의 몫”이라며 “북한이 전에도 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봐 왔고 앞으로도 이런 적대적 수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전형적인 공세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대북특사 임명과 관련해 “특사 지명 여부도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차관보급 인사까지는 4월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두세 달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대사 등 미국의 거물급 북한 전문가들이 평양 방문에 앞서 1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전직 미국 정부 관리와 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7명의 방문단은 베이징에서 이틀 동안 머문 뒤 북한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북단에는 보즈워스 전 대사를 비롯해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차관보, 조너선 폴락 해군대학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北, 김정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 추대

-- 2월 1일 노컷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33호 선거구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대의원 후보로 추대됐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1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군 총정치국장, 김격식 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정태근 군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 등 군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호 선거구 선거자대회를 갖고 김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한국의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보고에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는 우리 사회주의 조국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역사적 사변”이라면서 “최고사령관 동지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33호 선거구 선거자대회가 군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군 시설인 4.25문화회관에서 열린데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998년(제10기)에 제666호 선거구에서, 2003년(제11기)에는 제649호 선거구에서 대의원 후보로 추대된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선거구는 군 관련 선거구로 관측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제333호 선거구 선거자대회에서 대의원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10여일 후 이 선거구에서 대의원 후보로 공식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오는 3월 8일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WP “남북간 서해 군사충돌 가능성 높아져”

-- 2월 1일 노컷뉴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29일 “한반도가 전쟁국면에 이르렀다”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인하고 남한과 체결한 정치·군사적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함에 따라 서해상에서 남북간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미국의 유력신문인 워싱턴포스트가 31일(현지시간) 해외 단신으로 보도했다.

포스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합의 파괴 선언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북한 함정이 유엔이 서해상에 설정한 경계선을 침범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포스트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은 관심을 끌기 위해 격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남한 정부는 물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남북 합의 무효화 선언에 대해 “남한에 대한 북한의 수사(修辭)적 발언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이같은 공세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북한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은 이전에도 이같은 행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평양에서 적대적 수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前 UN주재 미국 대사는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비하라

-- 1월 18일 CFR

출처: <http://www.cfr.org/publication/18019/>

http://www.cfr.org/content/publications/attachments/North_Korea_CSR42.pdf

It possesse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o deliver them, and despite some progress, it is by no means clear that the ongoing six-party talks will be able to reveal the full extent of the country's nuclear activities, much less persuade Pyongyang to give them up. The United States maintains tens of thousands of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support of its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 country with which the North is still technically at war. And the peninsula sits in a strategically vital region, where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Japan, and South Korea all have important interests at stake.

All of this puts a premium on close attention to and knowledge of developments in North Korea. Unfortunately, Kim Jong-Il's government is perhaps the world's most difficult to read or even see. This Council Special Report, commissioned by CFR's Center for Preventive Action and authored by Paul B. Stares and Joel S. Wit, focuses on how to manage one of the central unknowns: the prospect of a change in North Korea's leadership.

법적으로 아직 전쟁 중에 있으며 동북아 주변 국가들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 김정일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곳이다. CFR에서는 북한의 리더쉽에 전망을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정리하였다, 그것은 안정적이고 관리된 계승을 통한 무리 없는 권력 승계, 김정일 사후 내부 권력 투쟁을 통한 승계 그리고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는 권력 승계의 실패 등이다. 저자는 미행정부에 북한 급변 상황에 대한 계획, 한일 등 우방과의 공조 그리고 중국과의 대화채널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金總書記を最高會議代議員候補に推戴

김 총서기를 최고회의대의원 후보로 추천

-- 2월 1일 시사통신

ラヂオプレス (RP) によると、朝鮮中央放送と平壤放送は1日、北朝鮮で3月8日に行われる最高人民會議(国会に相当)第12期代議員選挙の候補者として金正日労働党總書記を「推戴(すいたい)」する第333号選挙区の選挙者大会が平壤で開かれたと伝えた。大会には趙明録朝鮮人民軍總政治局長ら軍幹部が出席した。

라디오 프레스에 의하면,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월 31일, 3월 8일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 제12기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김정일 노동당 총서기를 「추대」하는 제333호 선거구의 선거자 대회가 평양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대회에는 조명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군 간부가 출석했다.

추천 논문

북한 정세와 남북한 관계 전망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건강악화 문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승계 문제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북한 지도부에서 ‘사실상의 장남’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정철의 나이가 만 29세, 우리 나이로 30세가 된다. 그러므로 차남인 김정철이 만 30세가 되는 2010년을 전후하여 그를 후계자로 지명하기 위한 ‘영도의 계승’ 준비작업이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리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와병중인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을 한 차례 수행한데 이어 공개활동 이후에는 무려 7차례 이상 수행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이것은 김 위원장이 과거보다 훨씬 당 내부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헌법상 5년마다 치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래는 2007년에 선거가 있어야 했으나 작년까지 실시하지 않았다. 테러지원국 해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 고조와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 등의 이유로 보인다. 연기됐던 최고인민대회 대의원 선거가 올 3월 8일 실시되고, 이를 통해 각 국가지도기관의 선거가 실시되면 권력엘리트 변동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북한 핵시설 불능화가 올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이후 북미간에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비핵화 3단계에서는 북핵문제뿐 아니라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수로 문제도 함께 협상테이블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내 북한과 오바마 정부 사이에 북핵 검증의견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 도출은 가능하겠지만 비핵화 3단계에서는 복잡한 미국의 섀페에 따라

핵폐기 로드맵 확정까지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당국간 관계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남북관계 개선으로 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부시 정부보다 더 타협적일 것으로 보이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 북미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려고 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좀더 안정적인 대외환경을 후계체계에 넘겨주기 위해 생전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즉, 임기 내와 생전이라는 공통된 목적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소극적인 협조 또는 ‘납치자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 등 북핵과 무관한 문제와의 연계 등으로 인해 2009년에도 북한 비핵화에는 난관이 많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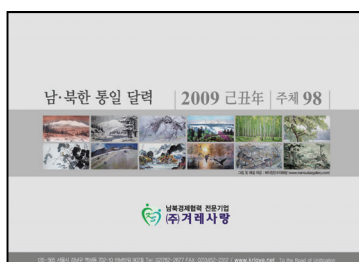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는 한국정부가 전향적인 대북 입장을 보이지 않는 한 경색국면이 장기화 될 것이다. 따라서 특사 파견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남북대화 전면재개를 선언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한이 이러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 복원은 물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sejong.org/pub_ci/PUB_CI_DAT/A/k2009-01_2.PDF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09년 己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겨레사랑 『2009년 남북한 통일달력』 제작, 독자들에게 드립니다



(주)겨레사랑에서 『2009년 남북한 통일달력(탁상용)』을 만들었습니다.

『주간 북한경제 동향』 독자님들 중 달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master@dprkinvest.org)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www.krlove.net -사전자료실에서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